



행보 예고

할수록 개인적 성향이 대외정책 의사결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의사결정 방식과 정책은 역설적으로 외교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 개인의 성격과 스타일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댄 맥에덤스 노스웨스턴대 심리학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친화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트럼프는 또 강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으며 공격적인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심리 상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거래’라는 ‘핵심 신념’과 함께 작용해 대통령 재임 동안 ‘위험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그는 예상한다.

실전 경험과 안보 지식이 풍부한 매티스와 플린 두 군인 출신의 중용이 안보 정책의 강경 노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로 냉전 시기 ‘국가 간 군사분쟁’을 살펴보면 미국은 연평균 3.93번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국가였으며 냉전 후에도 2001년까지 연평균 4.55번으로 오히려 빈도수가 늘어났다. 즉 국방장관의 출신 성분과 강경 노선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리처드 베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냉전 시기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 지도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력 사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 지도자들이 문민 지도자보다 더욱 신중했고 덜 강경했다. 군인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적이고 신중하다는 점은 새뮤얼 헌팅턴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매티스와 플린의 풍부한 실전 경험과 안보 지식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더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군사령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군인 출신이 많이 내정됐다. 물론 무력 사용이 결정될 경우 그 어느 행정부 때보다 강한 무력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인들은 무력 사용에 신중하지만 한번 결정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경해진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활용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외교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처럼 친화성이 떨어졌던 닉슨이 현실주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와 짝을 이뤄 1970년대 데탕트시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획기적인 협상력으로 얽힌 대로 얽힌 중동과 북핵 문제들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개인 외교관의 역할과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외교에 치중해왔다. 이런 미국의 외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인맥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강력한 국력의 시스템 외교에 풍부한 인맥과 색다른 경험의 날개를 달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의사결정 방식과 전략은 여전히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 맥에덤스 교수의 분석대로 트럼프의 외향적이고 강한 나르시시즘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자기 관념 등으로 인해 ‘위험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초강대국 미국에 걸맞은 ‘국가 역할 관념’을 형성할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트리트나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이렇게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가 늘어날 경우 한국은 기본계약 체결 후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받는 절충 교역이 아니라, 계약 전에 반대급부를 약속받는 ‘사전 절충 교역 협상방안 승인 제도’(프리-오프셋)로 거래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내각에는 대중 강경론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여파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한국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합참의장을 비롯해 대다수 펜타곤 고위 관료나 공화당의 중진들은 러시아를 미국의 제1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친러·반중의 방향으로 전환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을 고조시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미국의 역외 역할 축소(retrenchment) 공약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을 위해 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격랑 예상되는 미·중 관계

트럼프 잇단 자극에 중국 “본때 보여주겠다”

이희옥·서정경 성공중국연구소 교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미·중 관계 초반 기세싸움이 치열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반칙을 써서 성장한 나라”라고 말해왔던 피터 나바로 교수를 신설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내정했다. 경제뿐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새판 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공세적 대중 정책에 대해 ‘강 대 강’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판짜기(局道)’에서 밀리면 트럼프 집권 내내 전체 판이 밀린다’고 인식하면서 최대한 국력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어느 국가보다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 선호가 높았지만 지금은 점차 그 기대를 접고 있다.

중국은 ‘실제 트럼프(Real Trump)’와 ‘현실주의자로서의 트럼프(Realist Trump)’를 구분해왔고 선거가 끝나면 현실주의적 면모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았다. 리원(李文)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치가 분권형 체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힘에는 힘’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에는 힘’이라는 전형적인 ‘tit for tat’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우선 중국의 ‘정체성’과 ‘위신’을 건드리며 중국을 자극했다. 협상의 고지를 높이려 하는 전형적인 협상전술이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고립주의의 본질은 중국과 아시아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손을 떼더라도 중국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화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것이고, 강한 협상력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 건드린 트럼프 협상시 유리한 고지 선점 노력 핵심이익 양보할 수 없는 중국 ‘충돌도 불사’ 강력한 신호 보내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북핵 등 한반도 이슈 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며 정치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타협과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를 지속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협상과 타협이 원천 불가능한 사안이다. 남중국해도 ‘사실상’의 핵심이익이다. 중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 바로 앞 해역에서 근접 정찰과 군사 측량을 실시해왔다”고 비판하고 미군의 수중 드론(무인기)을 적발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은 공해상에서 중국이

트럼프 시대 미·중 갈등 예상 요인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후퇴

- 트럼프, 12월 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



-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 대통령 또는 당선인으로 처음
-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릴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 예고

- 트럼프, 국가무역위원회에 피터 나바로 교수 임명
- 나바로 교수는 대표적 대중 강경론자
-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임박했다는 해석

피터 나바로

남중국해 패권 대립 첨예 예고

- 중국 해군, 12월 15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수중 드론 1대 압수
- 트럼프, 12월 17일 “중국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
- 중국은 이후 전략폭격기 홍(轟)-6K의 대만 상공 비행 사진 공개

미군의 수중 드론을 불법적으로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돌려받지 말라”는 발언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의 잇따른 자극에 대해 중국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중국이 미국에 ‘충돌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강한 중국’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국내 정치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핵심’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권력 핵심으로 부상한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새판을 짜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미국 질서에 적응하거나 순응하는 것을 넘어 필요할 경우 도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보복수단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우선은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경제 재건에 발목을 잡는 형태의 경제적 대응이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인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수입을 줄이거나 대미 직접 투자를 줄이거나 미국 국채를 덜 사는 방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이끌던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그 전력 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외교의 중심성을 획득하라

미·중 간 ‘강 대 강’ 힘겨루기의 국면은 한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략적 불신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되면서 협력할 때도 서로를 경계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물론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패권국과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을 피하기 위해 판짜기가 끝나면 소강상태나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문제는 미·중 관계가 갈등이건 협력이건 일단 관계의 성격이 결정되고 합의된 판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안보자율성이 줄어들고 한국 외교가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상관성(relevance)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면서 중심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북핵, 미·중 관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구성해 한반도 문제의 ‘재(再)국제화’를 막는 대담한 전략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